

페미니즘 광고금지... 아이돌 광고는 허용

서울 교통공사

성·정치·종교 등 '의견 광고' 불허

최근 페미니즘 광고, 정치 광고 게재 불허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내에 '의견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무엇을 '의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 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학생겨레하나의 지난달 5호선 광화문역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위를 나란히 걷는 사

진과 함께 '남북이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를 실었다.

5월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이 4호선 숙대입구역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법 촬영 중단 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노원·광화문·종로3가 등 10개 지하철역에 게재됐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광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지자들이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다시는 지하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반면 아이돌의 생일 축하 광고는 계속 허용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의견 광고'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 팬심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돌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팬들이 하는 광고는 앞으로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서울-평양 본격 교류 대비 싱가포르 NGO에 길을 묻다

박원순 시장, 北 창업교육 '조선교류'와 간담회

"北, 소매·식음료 스타트업 관심 서울-싱가포르 합동연구 가능"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10년 간 1300여 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에게 창업교육을 해오며 북한 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ChosunExchange)'와 만남을 가졌다. 박 시장은 이들의 북한지원활동 노하우를 경청하고,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의 제프리 시 대표 등 활동가들과 화담을 나눴다.

2009년 창립한 '조선교류'는 북한 현지와 싱가포르 초청을 통해 지금까지 총 43회 이상 기업이 교육 및 스타트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총 13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적으로 좋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가운데)이 8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제프리 시 조선교류 대표(왼쪽 가운데) 등 조선교류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

평가를 받아 미국 하버드대가 선정한 '북한 내 가장 중요한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선교류'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교류'의 창립자인 제프리 시(Geoffrey See)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조선교류에서는 현재 8~9명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2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조직을 재개편했다고 한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와 시민들의 편당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한 달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용이하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양에서는 어떤 스타트업 사업이 인기 있냐"는 박 시장의 질문에 제프리 시 대표는 "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등에 관심이 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고 기술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매우 약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성 소수자 위한 '퀴어문화축제' 회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개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00년 처음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한국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개 문화행사다. 올해는 처음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13일 개막한다. 14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퀴어 퍼레이드'(도시 행진)가 예정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 불법대부 의심 70개업체 집중단속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불법대부 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단기 급전(일수) 대출과 꺾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자필서 및 이자율) 준수 여부 ▲계약 적정성 ▲대부광고의 적정성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2~4월)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10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행정지도(3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광고 전단. /연합뉴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현정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 관련 중사자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대부업체 등록 여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방치된 가판대·구두수선대 318개 정비

서울시, 공개입찰로 시설물 매각

서울시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시민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318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268개 시설물을 올 상반기 정비해 창고에 비치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50개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총 318개의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한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사

업'을 실시해, 서울시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올해 5회째인 '특례지원 사업'은 관련기관의 추천과 지난 4월 실시된 공개모집에 따라 총 66명이 신청했으며,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8명에게 시설물을 배정했다.

가로판대대는 19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었다.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돼 오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

례'가 제정됐다.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과 잡지 등을 팔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곳곳에 늘어난 편의점과 카드 미사용 및 시설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1990년대 4028개였지만, 이젠 그 수가 1955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배관한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한때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지만, 장기간 방치돼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보건소 도상훈련경진 실시 서울 25개구서 150명 참가

서울시가 재난대비의료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연다.

서울시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시 25개 구 보건소의 신속대응반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지원요원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도상훈련 경진대회는 다수상사자 사고현장 시나리오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도상훈련 ▲재난법령 및 비상대응매뉴얼 재난골드벨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의 등 총 3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hik1@

중소·벤처 연구자금 최대 10억 지원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실시 서울시, 내달 10일까지 기업접수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개발이 완료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포함)에 서울 시장 분야와 연계한 현장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참가

희망 기업은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 서울시정과 연계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법령 상 요구 절차를 모두 충족해 추가 인증·승인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은 SBA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서울산업진흥원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적정성 평가와 서울시 소관부서(실증수요부서) 실무협의, 기술·사업성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11월 최종 지원과제를 결정해 실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